

전교조 광주·전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촉구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제한등교 반복...교육격차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거리두기 2m 유지 학급당 16명 이하 확인...안전한 등교수업 교육환경 조성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23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14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위는 지금 당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의결해 본 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과 제한 등교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처하면서도 등교 대면수업이 가능한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 밖에 없다고 한다”며 “현직 교사들이 교실을 직접 측정한 결과 방역당국에서 강조하는 개인 간

거리두기 2m를 유지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16명 이하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뒤에도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과 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 지도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수업방식 도입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이날 오전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과 격주 등교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 답은 하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 문을 더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를 평균값으로 계산해서는 과밀학급의 문제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대면수업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평균의 함정에 빠져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오히려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안전하게 생활하며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는 초·중·고의 경우 20명 이하, 유아의 경우는 14명 이하”라고 주장했다.

전남지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 등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되지 않아 과밀학급은 등교일 내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된다.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두지 않고 안전한 등교수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낙지자원 회복 나선다

2025년까지 40억 투입...교접낙지 방류·산란서식장 조성 등

무안군은 지속가능한 낙지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교접낙지 매입 방류, 산란서식장 조성 등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탄도만 연안해역에 적합한 산란서식장 개발과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매년 8억원씩 5년간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또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어업인과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이 함께 의논하기 위해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무안군의 올 사업은 낙지산란장 확대와

낙지 이식을 통해 어장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낙지 자원조성 매뉴얼 수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군은 올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획량·개체수 조사 등 효과분석을 통해 개선할 사항을 다음해 사업에 반영해 낙지 자원 회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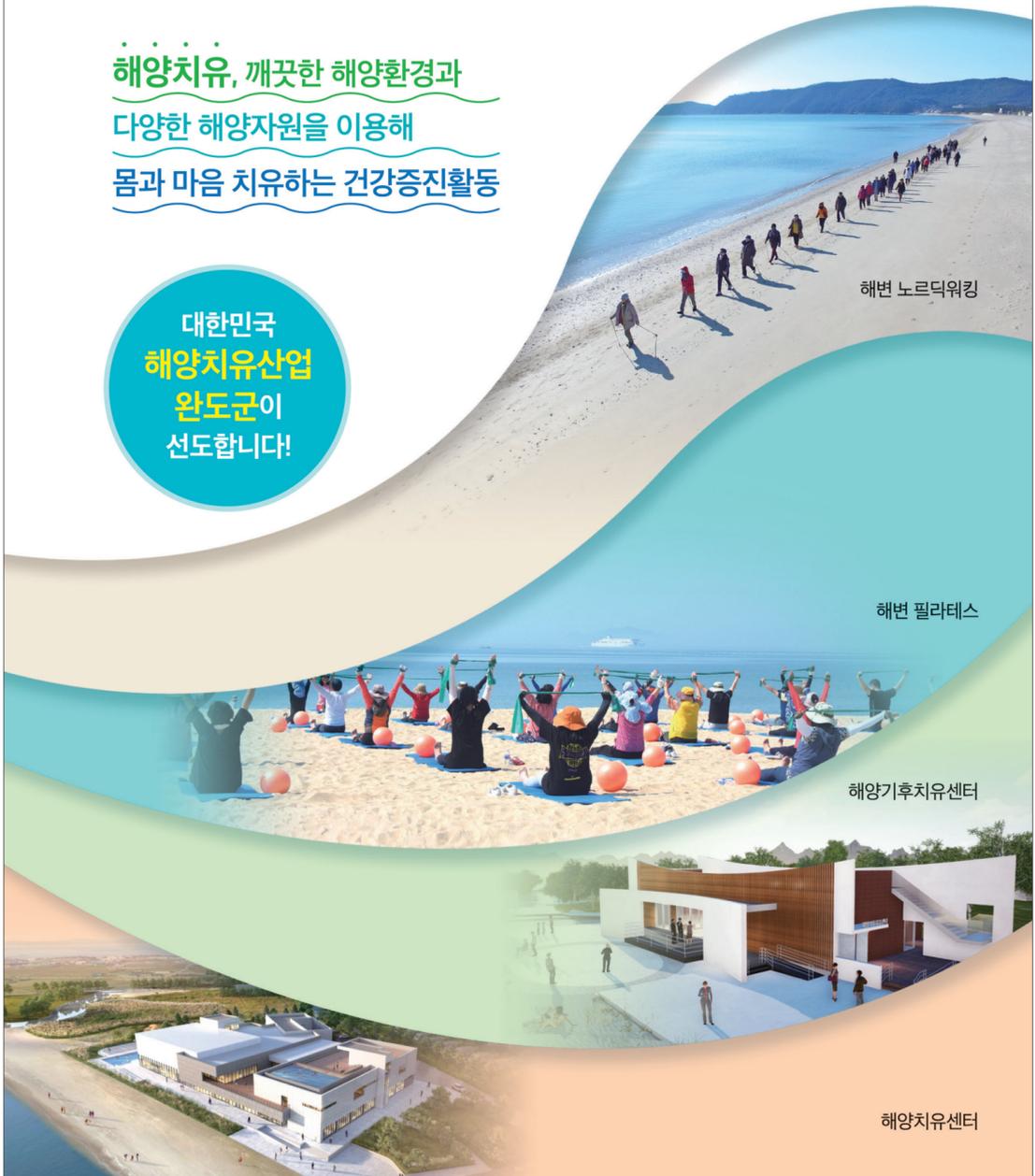
김산 군수는 “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낙지 서식에 적합한 공간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무안 낙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



광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12년만에 '화해'로 종결

반환금·추가 지급수당 원금 상계 방식으로 마무리

10년 넘도록 진행돼온 광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결국 화해로 종결됐다.

23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소송이 당사자 양측이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12년 간의 법적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광주 소방공무원 560여 명은 지난 2009년 12월, 광주시장을 상대로 “실제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청구액은 2006년 12월부터 3년간 1인당 500만 원씩, 모두 28억3000만 원에 달했다.

광주시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정된 예산범위 안에서만 초과수당을 지급해온 데 대한 조직적 반발이었다.

소방관들은 “2, 3교대자가 전체 소방공무원의 60%에 달하고, 이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240~360시간으로 일반직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의 1.5~2배임에도, 각 지자체는 초과근무시간 중 60~75시간에 대해서만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인 지난 2012년, 법원은 1심에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휴게시간과 휴일에 근무한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2019년 유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휴일근무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방관들은 9년 전 지급받았던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 반환해야 할 수당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놓고 광주시와 소방직 공무원들의 지난한 법리 싸움이 또 다시 지속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법적 판단보다 화합이 중요하다고 판단, 대승적인 차원에서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반환 금액과 추가 지급수당 원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 소송을 마무리했다.

최민철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했지만 시의 이번 결단으로 길고 길었던 소송이 끝난 만큼 소방조직 분위기를 쇄신해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